

광주·전남도 코로나 재유행...다시 커진 '팬데믹 공포'

한달새 확진자 수십배 급증에 불안감 증폭... '깜깜이 환자'도 많아 진단키트 동나고 마스크 수요 폭증... "격리 어려움" 직장인 등 혼선 지자체, 치료제 재고 현황 공유·감시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 나서

광주·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동이 나고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등 '팬데믹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하루 종일 '진단 키트가 다 떨어졌다'며 손님을 돌려보내느라 진이 빠질 정도"라고 말했다.

A씨의 약국에는 열흘 전부터 진단 키트를 구하는 손님이 부쩍 늘어 하루에 10여명씩 찾아오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4명의 손님이 진단 키트를 찾았는데, 재고가 없어 주지 못했다.

A씨는 "그동안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없어 발주를 해 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며칠 새 동이 났다"며 "추가 발주를 하려고 해도 진단 키트는 의약품 도매상에게도 재고가 없다고 하니,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고 혀를 찼다.

인근에서 다른 약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동구 충장로의 다른 약국 관계자인 B씨는 "한동안 팔릴 일이 없었던 진단 키트가 요즘은 평일에는 하루 3~4개씩, 주말에는 배로 팔려나간다"며 "다행히 재고가 조금 있지만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병원 14곳에 신고된 코로나 확진자 수는 7월 1주차

(2024년 26주차) 2명, 2주차 1명, 3주차 7명, 4주차 17명, 5주차 37명, 8월 1주차 85명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본 감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통계에 기록되지 않아 '깜깜이 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모(여·26)씨는 "최근 목이 따끔거리고 기운이 없더니 일주일간 목소리가 쉰 것처럼 나타나고 계속 기침하고 열이 나더라"며 "코로나가 의심돼 진단 키트를 사볼까 했지만, 코로나 양성이나와도 직장을 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확진자에 대한 자기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직장인과 학생 확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경계' (3단계)에서 '관심' (1단계)로 낮추고 방역 의무조치를 모두 '권고'로 변경했다. 현재 코로나 격리 의무는 없으며, '기침·발열·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만 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전모(56)씨는 "직원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연락을 해 왔는데, 규정을 찾아보니 그냥 마스크 쓰고 출근해도 된다고 하더라"며 "바쁜 시기에 일단 출근하려고 했는데, 고객들이 전염될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난 14일 광주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이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까 불안하고 걱정돼 일도 제대로 못 시켰다"고 말했다.

최모(여·29)씨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당당에는 연차를 쓰고 하루 쉬

었지만 다음 날 바로 마스크를 쓰고 출근했다"며 "회사에서는 병가를 쓰라고 했지만 말고 있는 일이 많아서 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기존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오미

كرون KP.3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데 따라 코로나가 급속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KP.3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은 지난 7월 기준 45.5%로 전월대비 33.4%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서는 휴가철 시민들의 이동이 잦고, 환기가 안 되는 에어컨 냉방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 집 집 등으로 인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보건소·조제 기관(약국)과 채팅방을 만들어 실시간 코로나19 치료제 재고 현황을 공유하고, 광주시약사회와 협업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 목록을 공유하고 조제 가능 여부를 지속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감시체계를 표본감시 병원뿐 아니라 112개 병원에서도 주1회 감시하도록 확대했으며, 전남도의사회에 고위험군 우선 치료를 협조 요청하고 마스크(KF94), 손소독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4만2000개를 시·군 보건소에 긴급 지원해 감염 취약시설에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일본에서 크게 확산했던 KP.3 변이 바이러스가 휴가철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추석 연휴와 환절기까지 찾아오면 확산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단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낮춰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장성서 학교 에어컨 설치 알바생 온열질환 사망

작업 중 호흡 곤란 등 호소

장성의 한 학교에서 에어컨 설치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15일 장성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장성군 남면의 한 중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A(28)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출동 당시 A씨의 체온은 41~42도 수준의 고온이었으며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중학교 급식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총 4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에어컨 설치 작업은 이날 오전부터 지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A씨를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2번째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5월 20일-8월 14일)에 따르면 광주·전남 온열환자 수는 총 344명(광주 52명, 전남 292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3명 발생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어머니 살해 조현병 환자 항소심도 징역 12년

광주고법, 보호관찰 5년도

정신질환으로 망상에 빠져 친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자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의 징역 12년을 유지하고 직권으로 보호

관찰 5년을 추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2시40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6시30분경까지 순천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오래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호전돼 퇴원해 B씨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태를 보면 호전돼 퇴원한 점, 주변인과 인사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신 상실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증상은 완치가 어렵고 출소 후 자발적 치료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은 수준이 나온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치료감호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호관찰을 직권으로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 금품 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벌금 1억원 부과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1억원과 추징금 6200만원도 부과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와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입형 유치원 업무 부서는 교육청이기는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매입형유치원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예산 심의·결산 등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최 전 의원이 직전까지 교육문화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육청 행정국과 행정예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자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7개월 후 자수여사를 밝히고 귀국했다. 최 전 의원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